

◆ (정책동향) ① 비친족가구 주거정책 동향

- ▷ 혼인·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비친족과 함께 사는 가구는 향후 지속 증가할 전망
- ▷ 가족 개념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의 보편성이 약해지고 다양화되는 가운데, 가족 개념 변화에 부응하여 주거정책 개선이 필요

◆ (지역동향) ② (전 국) 유기동물 보호·지원 정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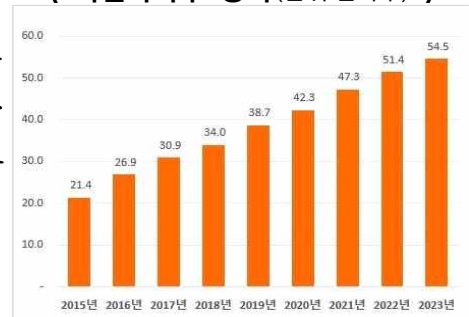
③ (부산·경남) 경마공원 운영 관련 지역 불이익 논란

1 비친족가구 주거정책 동향

※ <국토연구원> ‘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’(’25.3월) 참조

□ 비친족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

〈 비친족가구 증가(단위:만가구) 〉



출처: 통계청

- 비친족가구란 혼인·혈연 등으로 맺어진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, 친구, 학교 선·후배, 직장 동료 등이 룸메이트로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서,

- 최근, 비친족가구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*를 보임

* 비친족가구는 '18년 34.0만 가구에서 지난 5년간 1.6배 증가해 '23년에는 54.5만가구를 기록

- 국토연구원에 따르면, 비친족가구 가구주 연령은 20대이하(16.3%), 30대(28.1%), 40대(15.3%), 50대(17.8%), 60대(22.6%)로 고르게 나타나며, 가구원 수는 2인 가구(90.3%), 3인 가구(7.2%), 4인 이상(2.5%)으로 조사

- 함께 사는 이유로는 정서적인 이유가 38.0%로 가장 많았으며, 주거비 절감 26.9%, 생활비 절감 8.7% 順으로 응답

※ 40대 이하는 독립 이후 혼자 살다가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살게된 경우가 주를 이루고, 50대 이상은 결혼경험이 있으며 이혼이나 사별 후 비친족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음

-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친족가구의 증가는 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, 1인 가구 급증, 주거비 부담, 결혼·출산 기피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되며, 앞으로 비친족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
- 다만, 현행 주거정책은 전통적인 개념에 기초해 '법적 가족' 또는 '1인 가구'로만 수혜자를 한정하고 있어, 비친족가구는 대출지원,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

□ 가족 개념 변화에 부응하여 주거정책 개선 필요

- 국토연구원은 주거정책을 다양한 생애 경로*를 고려하여, 기존의 '가족 단위'에서 '거주 단위'로 주거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
 - * 이혼을 경험하거나 양육 등 사정으로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혼동거나 친구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를 위한 제도적 보호·지원이 미흡
- 비친족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거주계약서 법제화* 등 제도 개선과 함께, 주거 지원을 위한 세어형 공공임대주택 지원, 주택 청약, 주택금융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,
 - * 공동거주계약서(임차인 간 연대책임, 보증금 납부비중, 반환권리 규정) 법제화
- 아울러,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, 이들이 결혼 이외에 '함께 살기*'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 마련이 필요
 - * 아플 때 도움, 심리적 유대감, 범죄·재난으로부터 안전 등 1인 가구의 취약성을 보완

□ 자치단체는 청년 및 노년층 대상으로 공유주택 공급·지원

- 서울시는 '13년부터 노인이 청년에게 방을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는 '한지붕 세대공감' 사업을 추진 '20년에는 공동체주택* 市 인증제, 주택 내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시작, 올해 2월에는 그간 공유주택 전입신고 시 區마다 요구하는 절차가 달랐던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발표
 - * 세어하우스(침실만 구분), 코리빙하우스(호실 구분, 공용라운지 등 존재) 등
- 울산시는 3월 공유사무실·주방·라운지를 갖춘 청년희망주택(150가구 규모)을 착공, 울산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區가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을 공급할 계획
- 세종시는 '17년부터 舊 도심지(조치원)에 시중 시세의 3~50% 수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청년 셰어하우스(현재 61가구)를 운영 중
- 경기도는 입주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기숙사·체육·여가시설을 구비한 '기획타운('26년 착공)'을 우만테크노밸리(수원)에 조성할 계획, 경기 수원시는 '22년부터 市가 보증금·임대료를 지급하여 무주택 보호종료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'셰어하우스 CON'을 운영
- 충남 청양군은 청년층 대상으로 공동거주 외에 교육·문화컨텐츠도 함께 제공하는 공유주택 '함께살아U'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건설('25.12월 준공 예정), '24년에는 고령(65세 이상) 퇴원환자 중 주거취약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(남녀 각 5세대)도 운영 시작

2 전 국(유기동물 보호·지원 정책 추진)

-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인식이 보편화됐으나 매년 유실·유기되는 동물이 11만 마리를 상회, 다양한 보호·지원 정책이 시행 중
- 정부(농식품부)는 '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('25~'29)'을 수립, 동물 학대법은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'사육금지제'를 도입('27년)하고, 동물 유기 시 벌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
- 경기 양평군은 '동물보호법'에 따른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비용을 지원(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)
- 경북 상주시는 연간 500마리의 마당개 중성화, 1,500마리 동물등록 등 사업을 실시하고, 타 지역으로 유기동물을 입양보내기 위한 SNS를 운영, 입양률 70%, 안락사 비율 감소(74→11%) 등 성과를 도출
- 경남도는 시·군동물보호센터가 보호하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입양장려금, 펫 보험비용, 장례비용 등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'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'을 시행
- 제주도는 지난해 입양 전용공간 '아우름동' 운영 등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률(18%)을 상승세로 전환, 올해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2억 2천만원을 투입해, 중성화 수술비,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도외 입양자에게 항공료 10만원을 지원할 예정

3 부산·경남(경마공원 운영 관련 지역 불이익 논란)

- 한국마사회는 국내 4번째 경마공원인 '영천 경마공원'의 '26년 개장을 앞두고, 경주마 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부산경남 경마공원 소속 경주마의 순회 경마 실시 계획을 수립
 - 이에 따라,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경기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, 부산·경남 지역사회에서는 경마장 경주 축소가 레저세 감소로 이어져, 지방재정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
- 현재 마권 발매액의 10%에 해당하는 레저세의 부산·경남지역 규모가 한 해 1천억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年 최대 300억원 감소를 예측
 - 특히, 경북도와 영천시가 과거 경마장 유치 조건으로 30년간 레저세 50% 감면을 내세웠던 점을 들어, 마사회가 지역과 협의 없이 수익 극대화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
 - 아울러, 부산경남 지역 마주들은 장시간 이동에 따른 말의 혹사를 이유로 마사회 결정에 반대, 최근 영천 경마공원 경주 불참을 선언
- 코로나19 이후 경마산업의 침체기 속에 지역 간 세수 확보 갈등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,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

참 고

시·도지사 주요 일정(3.25)

시·도	시 간	내 용
서 울	-	· 청내근무
부 산	10:00 18:00	· 해운대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1주년 기념행사 · 2025 미래산업 리더스포럼
대 구	-	· 청내근무
인 천	10:00	· 市의회 제301회 임시회
광 주	15:00	· 2025 광주 방문의 해 선포식
대 전	14:00	· 대전·충남 행정통합 국회 포럼
울 산	10:30	· 제8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
세 종	11:20 16:00	· 찾아가는 현장소통 '新우문현답' 개최 · 3월 읍면동장 회의
경 기	19:00	·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초청 특강
강 원	-	· 청내근무
충 북	10:10	· 보은군 순방
충 남	14:00	· 대전·충남 행정통합 국회 포럼
전 북	10:00	· 道의회 제417회 임시회
전 남	-	· 청내근무
경 북	17:00	·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협력기관 업무협약식
경 남	16:30	·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
제 주	14:00	· 道의회 제436회 임시회